

# 6·25 北 귀순병 33%가 심리전 덕분에 살았다

## 태평로



안용현  
논설위원

6·25 때 미 극동사령부가 전단(빠라)을 처음 뿌린 건 남침 사흘 만인 6월 28일이었다. 도쿄에서 날아온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미군과 유엔이 한국을 돕기로 했다'는 전단을 쏟아냈다. 민심 동요를 진정시키려는 심리전이었다. 전쟁 기간 유엔군이 뿌린 전단이 25억장이다. 당시 전 세계 인구에게 한 장씩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이다.

효과는 컸다. 전단을 보고 귀순한 북한군과 중공군이 셀 수도 없다. 당시 포로 심문에서 투항한 이유로 '심리전 영향'이 33%로 '전쟁 상황'(38.6%)에 이어 둘째였다는 미국 조사 결과가 있다. 전단에는 지식과 남편을 기다리는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여인, 따뜻한 쌀밥 등을 그려 넣은 경우가 많았다. 후한의 전선에는 "일어 죽기 전에, 다쳐 죽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도망하라"고 적어 뿌렸다. 담배를 맡아 피울 수 있는 전단도 있었다. 고립된 북한군의 마음을 흔들었다. '안전 보장 증명서(Safe Conduct Pass)'라고 인쇄해 투하했더니 그걸 소중히 품고 줄줄이 넘어오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투항한 북한군이 개입한 전단의 효과가 가장 확실했다고 한다.

북한군 00사단과 대치할 때면 그사단 출신 귀순병이 죽은 전우 이름이나 부대 관련 불만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같이 살자'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뿌렸다. 당시 북한은 '조국 해방' 같은 선전전을 펼쳤지만 최전선의 병사는 '맞춤형' 전단에 더 끌렸다. 이런 심리전 덕분에 귀순한 북한 청년들은 목숨을 보전했고 이후 김씨의 노예 생활을 겪지 않아도 됐다.

김정은이 북한군 1만여 명을 러시아로 보냈다. 현재 전황과 러시아의 '고기 유엔군 뿌린 심리전단 25억장 투항 북한군이 만들면 효과 커'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 있어 파병 북한군도 살려야 한다

분쇄기' 식 병력 투입을 보면 북한군은 총알받이로 때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배치됐다는 쿠르스크 지역은 몸을 숨길 데가 없는 평원이다. 겨울이 다치면 니콜레오의 프랑수아, 히틀러의 독일군처럼 얼어 죽는 청년도 속출할 것이다. 파병 부대가 특수전 훈련을 받은 '폭풍군단'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힘든 부대는 서민의 자식들만 간다"(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고 한다. 북에서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의 자식은 빼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서민 자식들의 피 값으로 호주머니를 채우고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무기 기술을

얻고 있다.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 탈북민 3만4000여 명 중에는 북한군 경력자가 적지 않다. 폭풍군단 출신도 있다. 왜 전쟁하러 나왔는지도 모를 북한 청년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심리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다. 살상 무기로 북한군을 죽이지는 것이 아니다. 살리자는 것이다. 한두 명이 귀순하면 북에 인질로 잡힌 가족들이 걱정되겠지만 수백 명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전이다. 러시아군 귀순도 드론으로 안전 보장과 행동 요령을 적은 전단을 뿌린 뒤 드론을 따라오라고 유도하고 있다. 이런 전단은 6·25 때 '안전 보장 증명서'와 유사하다. 러시아와 뿌리가 같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군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효과적인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북한 사람은 본 적도 없을 것이다.

좌파·진보 세력은 생명 가치가 최우선이라고 해왔다. 생명을 내걸고 반전(反戰)·반핵(反核) 시위를 하곤 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파병에 대한 형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거나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다. 북핵 개발 때 '우리 북한이 그럴 리 없다'고 하던 태도와 똑같다. 북한에 대해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해놓고 '우리 민족'인 북한 청년을 살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심리전 지원을 말하면 "한반도 전쟁 확"이라고 흥분한다. 김정은이 파병한 생명의 가치는 다른 건가.

## 김준의 맛과 섬 [13]

### 목포 먹갈치 구이

갈치는 길이보다 폭이 중요하다. 그 폭을 손가락 수로 가늠한다. 폭이 넓으면 살이 도톰하고 기름지며 식감도 좋다. 구이용은 4지 이상이 좋고, 그보다 작은 것은 조림으로 이용한다. 5지면 갈치 폭이 어른 다섯 손가락을 붙였을 때 폭만 한 갈치를 말한다. 이런 갈치는 대갈치라 한다. 갈치 구이 전문집에서는 대갈치도 내장이 있는 부위와 꼬리 쪽은 조림에 넣고, 가운데 두세 토막만 구이용으로 한다. 이런 갈치를 구우면 한 토막이 접시에 가득하다.

갈치는 꼬리는 아래로 머리는 수면으로 향하게 수직으로 몸을 세우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오징어, 전갱이, 전어, 새우류, 멸치 등 표층 어류를 잡아 먹는 육식동물이다. 제주도도 동중국해에서 월동하며, 수온이 오르면 북상

해 늦봄에 산란한다. 산란 뒤 여름과 가을에 먹이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래서 겨울살이를 위해 풍부한 지방질을 몸에 비축한 가을 갈치가 구이용으로 좋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갈치는 먹갈치와 은갈치 그리고 수입 갈치가 있다. 은갈치와 먹갈치는 우리 바다에서 잡은 갈치다. 목포에서 구이로 내놓은 갈치는 대부분 먹갈치다. 먹갈치와 은갈치는 같은 갈치지만 잡는 어법에 따라 구분해 부른다. 먹갈치는 목포를 중심으로 서남해에서 그물로 잡은 갈치이고, 은갈치는 제주를 중심으로 남서해에서 그물로 잡은 갈치이다. 유자망, 안강망, 선망, 낭장망 등 그물로 잡을 경우, 그물에서 갈치들이 서로 부딪치면서 은빛 구아닌(guanine)이 떨어진다. 이런 갈



치 색은 어둡게 보인다고 해서 먹갈치라 부른다. 그물로 잡은 갈치라도 밀물과 썰물이 바뀌기 전에 바로 그물을 털면 은빛이 잘 보존된 갈치가 잡히기도 한다.

목포로 들어오는 갈치잡이 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까지 내려가 안강망을 이용해 가을과 겨울에 잡는다. 이렇게 잡은 먹갈치에 천일염을 뿌리면 벗겨진 은막 사이로 간이 배어 풍미가 높아진다. 목포 먹갈치 구이는 해류와 조류를 이용한 어법과 갯벌을 이용한 천일염이 만나서 탄생한 음식 양상불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 社 說

###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지난 총선 때 선거 여론조사 중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4년 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쓰는 수법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가 27건이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건수가 이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론조사 기사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 이번 총선 때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4127회였다. 이 중 51건만 문제가 있었다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관위는 정당과 방송·신문사는 물론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 사용자가 있는 인터넷 언론사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이 때문에 명태군씨는 2021년 대선 경선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의 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제 와서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도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 취소 사유를 기존의 '선거 여론조사 범죄'에서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해 영구 퇴출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기 어렵다. 한국은 여론조사를 참고 자료 정도로 사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달리 정당의 후보 공천과 후보 단일화 등 정치 전반에 이용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정치를 흔들다 보니 조작 유혹도 크다. 민주당은 명태군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81건을 모두 수사하자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친민주당인 김여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이번 부산 금정구청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가 22%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김씨 업체는 지난 1~3월 총선 여론조사 781건 중 37%인 286건을 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주당의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인 명태군 사건에 그치지 말고, 여야로 수사를 확대해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 세력의 실체를 낱말이 파헤쳐야 한다. 정치 컨설팅과 여론조사 명목으로 후보들에게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들도 규명돼야 한다. 여론조사 조작의 전모를 밝혀야 대책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때는 법무 차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 국회 규칙은 국회 몫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의 공정성을 위한 상설적 규칙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경우 여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국회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꿔 버렸다. 이는 특검 추천권을 행정·사법부와 여야가 골고루 갖도록 한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 규칙은 일반 법률과 달리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진실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해 일할 특검을 임

명하려는 것이다.

현재 예산안과 부수 법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심사를 못 마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서 도입한 제도다. 예산안의 고질적 지각 처리와 준예산 편성 위기 반복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자동 부의'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지역 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을 끼워 넣거나 입법부 장악을 넘어 행정부에 영향력을 키우려 할 수도 있다.

국회 운영에 관한 법과 규칙은 여야 합의로 바꾸는 것이 관례였다. 관례이기 이전에 상식이다. 경기 규칙은 경기 참여자들의 합의 아래 바뀌어야 한다. 다수결로 정하면 독단 운영이 뻥하고 이는 '의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문율이던 선거제를 맘대로 바꾸더니 국회 규칙의 변경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한국 국회는 민주당 안방이나 마찬가지다.

###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중국이 지난해 7월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할 때부터 우려되던 일인데, 첫 한국인 적용자가 나왔다. 삼성전 자 반도체 부문 출신인 이 교민은 한때 몸담았던 중국 반도체 회사의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중 간 반도체 전쟁에 끼여있는 한국 반도체 인력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1월 러시아에서는 북한 발목공과 탈북민을 돕던 우리 선교사가 간첩죄로 현지 당국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사안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난 7월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가깝게 지냈던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했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몇 달 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중·러의 대립, 그에 따른 신냉전 양상, 기술 경쟁의 격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세계는 지금 정보 전쟁 중이다. 그만큼

타국의 정보 활동에 각국이 민감해져 있다.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간첩 혐의라며 체포한 뒤, 상대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 외국에 사는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아직도 우리 형법과 군형법은 '적국(북한)'을 위하는 행위만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우리 첩보 요원 신상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은 무소식이다. '외국대리인' 등록제를 만들어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북·중·러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은 치열한 정보전의 대상이다.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하고 외국 간첩도 기소할 수 없는 우리 국경원은 손발이 묶였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쓰고, 우리는 외국인 진자 간첩을 처벌하지 못한다. 국회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

# 왜, 《국회 모욕죄》만 있고 《국회의 모욕죄》는 없나?

자기들은 《운갓 막말》 다 하면서

국회의원은 손톱도 건드리면 안 되나? 누가 그런 《일방적 특권》 썼단 말인가? 이게 《의정(議政)》인가? 《서부국》이지! 지금은 《운동권》들이 《부패한 권력》



▲ 이재명당 의원들만 《정의의 사도》? 국정감사 출석 정부기관장들과 중앙들을 그쳐 《죄인》 취급하며, 겁박하고, 막말하고,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곳이 국회? 참다 못해 반박하면, 무슨 《신성(神性)》모독이라도 당한 듯, 파르르 떨며 《국회 모욕죄 고발》을 때려댄다. 중세(中世)시대(광안국)이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학, 김태규, 최달영. © 정삼용 이준현 기자

### 싸우는 자유인들

이젠 자유인들도 싸우기 시작했다. 대북 전단 활동가 박상학,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 ① 국회 외무위 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이 박상학에게 물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위법》 아닌가?" 박상학이 되물었다.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왜 《위법》? 여기가 《최고인민위원회》인가? 여기가 《법정(法廷)》인가?"
- ② 파방위 감사에선, MBC 대주주(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정회중에 실시했다. 방통위 김태규 직무대행이 혼잣말로 개탄했다. "열여덟, 사람 죽이네!"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자기들도 "안마, 이 자식, 법관 주재"라 했으면서.
- ③ 법사위 감사에선, 민주당 의원이 자료 열람을 거부하는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 최달영 총장도 되물었다. "너무 한 것 아니냐?" 국감이 끝나자 최달영 총장이 항의했다. "왜 발언권을 안 주었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질렀다. "짜지는 거냐?" 그도 《국회 모욕죄》로 고발당했다.

### 《운동권》들만 《정의+진리의 대리자》?

이재명당 금배자들 많이 웃겼다. 자기들은 남들에게 《운갓 막말》 다 하면서, 《남들은 자기들을 손톱만큼도 건드리면 안 된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일방적 특권》을 줬나? 왜, 《국회 모욕죄》만 있고, 《국회의 모욕죄》는 없나?

국회 판이 하루가 멀다고 《더-더-더》 폭력화한다. 이게, 《의정(議政)》인가, 《황야의 무법자》인가? 왜 사람을 불러놓고 《죄인 취급》하나? 그런 《무례》에 대들지 않을 사람 있나? 어쩌다 그들이 그 지경 됐나?

자칭 《진보》는 자신들이 《정의+진리》를 독점한 양 행세한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주인공들이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神)의 정의를》 대신한다고 《자만》한다. 《고결한 진보》는 《쓰레기 보수》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투다. 이런 《과대망상》은 22대 국회에서 더더욱 심해졌고 악화했다. 왜?

### 《운동권》들의 《마지막 발버둥》

오늘의 좌파는 《정치적·도덕적·문화적 자질》을 완전히 잃었다. 남은 건 《두꺼움》 뿐이다.

그들은 한때 《민주와 정의》를 입에 올렸다. 그러나 오늘 의 그들은 《부패한 기득권》에 불과하다. 이젠 그들이 《패자정》으로 갈 때다.

그들 수십 명은 《돈 봉투 사건》에 걸렸다. 《보스급》들은 감방을 예약해 둔 상태다. 그런 자들이 《발버둥》친다. 판사·검사들을 오히려 겁박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국회가 저 모양 된 원인이다.

### 기죽지 말고, 더 세계 대들자

자유인들은 움푹에선 안 된다. 더 세계 받아쳐야 한다. 《몽둥이가 약》이다.

### 박상학, 김태규, 최달영 파이팅!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뉴데일리 칼럼 더보기 ▼

류근일 칼럼: 《김씨조선》 왕국 몰락 할지도

우크라이나는 김정은 빠져 허우적댈 《늘》... 《#3의 전환》 기회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카(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10월 26일 게재 되었습니다.